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9월 4일(통권 71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누구의 인권을 위한 납치주장인가? -탈북 여종업원 기획탈북론과 인권문제-

김 태 훈
한반도 인권 · 통일 변호사모임 회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중국 저장성 Ningbo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4월 집단 탈출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기획 탈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변의 문제 제기로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2년 동안 다툼이 계속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행정적 · 사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국정원의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저장성 Ningbo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2016년 4월 집단 탈출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기획 탈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하는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5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국가정보원) 요구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한국으로 왔으며 당시 여종업원들은 목적지도 모르던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지난 5월 JTBC 및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허씨에 의하면 2016년 초 한국의 정보기관에게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19명의 여종업원을 함께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받았고, 허씨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정보기관원은 허씨의 그동안의 남한 협력 사실을 북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수백만 달러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직전 두 명의 종업원에게 한국행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그 두 사람과 나머지 3명은 이를 감지하고 도망갔고, 이 바람에 급히 서두르다가 또 다른 두명은 교통사고로 비행기를 못타 결국 여종업원 12명만이 4월 7일 입국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시 함께 JTBC에 출연했던 한 여성은 '북한으로 송환을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나아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은 지난 달 1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업원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거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강일씨 등의 류경식당 여종업원에 관한 최근의

납치 주장은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2016년 4·13 총선을 위해 짠 '기획 탈북'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년 전 통일부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제시하며 종업원들의 자유 입국사실을 발표한 것은 총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14일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 4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과거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처럼 이번 일도 꾸밈을 가능성이 있고, 유엔 인권 책임자의 의견도 있는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탈북 여종업원 중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는 데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나아가 이미 검찰에 의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것은 '보충성 원칙(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3조)'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우선,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이 2년 전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북한 정권은 남한 국정원에 의한 기획납치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동조한 민변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2년 동안 다툼이 계속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민변은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부터 자유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신청이 현행법상 근

거가 없다고 보고 대신 대한변협이 파견한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2016년 5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이던 류경식당 탈북자 13명 모두를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과, 종업원들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신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인신 구제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6인2)을 제기했다. 이런 청구는 모두 각하됐고, 두 소송은 각각 2017년 3월과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밖에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국정원의 탈북 종업원에 대한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자유 탈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개입했고, 법원까지 최종 재판을 내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사항에 관해 피력한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 인권상황'과 '북한 당국의 국제인권 규범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계속 탈북 여종업원들의 납치·유인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인권 위기'와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탈북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출로 조사된다면, 강제 납치라는 전제하에 북한 당국이 온

전히 놔뒀던 탈북자들의 재북(在北)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해질 공산이 크다. 반대로 납치됐다는 종업원들의 주장이 2년 전과 다른데도 진정한 의사라고 간주하고 헌법 및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인 북한에 복송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가 되기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 한국 내 탈북자 사회는 이번 송환 논란이 자신에게 옮겨 붙을까 동요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연락처가 어떠한 연유로 언론기관에 알려져 노출이 되었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자행된 강제 복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강제복송 위기'가 벌어진다면 악몽으로 여길 것이다.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인권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